[2005.10.4, 화, 서면 보고자료, 혁신관리비서관실]

『행정정보 공유사업』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검토 보고

□ 보고 배경

○ 9.30, 대통령님께서 국내언론 보도분석 자료 중 "행정정보 공유 범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 삐걱, 전자민원서류 안전판 못된다"는 보도의 실상과 대책에 대한 보고를 지시하심

□ 기사 내용 확인

"최근 인터넷민원서류 위·변조사태는 2007년 범정부통합전산센터가 가동하면 해결된다고 정부가 발표했으나, 막상 통합전산센터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 이에 따라 각종 민원의 대폭 감축도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" 라고 보도

< 사실 내용 >

○ 인터넷 민원서류 위·변조 방지효과가 있는 사업은「**행정정보 공유사업**」이나, 동 기사에서는 전산환경 효율화를 위한「**범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**」으로 잘못 보도하고 있음

※ 행정정보공유사업 (행자부 주관)

- 주민등록정보 등 각 부처별로 보유한 36종의 주요행정 DB자료들을 공유·활용함으로써, 불필요한 민원서류의 제출을 줄이게 되어 민원서류의 위·변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

⇒ '05.7.20 행정정보공유 국정과제 회의시 보고드린 계획대로 추진중

※ 범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(정통부 주관)

- 각 부처가 가진 서버 등 주요 전산장비와 담당인력을 집중 관리함으로써, 전산환경을 제고하고 유지운영 비용을 줄이려는 사업으로 각 부처 장비·인력 등을 1센터(대전, '05.10), 2센터(광주, '07.7)로 나누어 이전하는 것임

⇒「통합전산 1센터」는 금년말 설립을 목표로 진행중

"정보를 공유·공개하는 동 사업은 행자부 소관 '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'과 정통부 소관 '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'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"고 보도

< 사실 내용 >

○ 개인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근거가 필요함

○ 이에 따라, **정비대상 법률의 조사 등을 추진**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대통령 훈령으로「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」을 마련하여 부처협의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음

- 향후 동 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법적근거 미흡 부분을 해소할 계획임

"가장 큰 문제는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부처의 집단 이기주의이며, 국방부, 국세청, 경찰청 등에서 타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꺼리고 있다"고 보도

< 사실 내용 >

○ 구체적인 행정정보 공유 범위는 훈령 제정과 함께 구성될 **'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'**(위원장: 총리)**에서 결정**할 사항임

- 다만, 일부 정보(예: 경찰청의 범죄 정보)의 경우 보안,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공유가 곤란한 경우도 있으나, 이는 향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서 현 시점에서 부처의 집단 이기주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

※ '05.7.20 국정과제회의에서 36종의 주요정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정보공유를 추진키로 기 결정

[2005.10.4, 화, 서면 보고자료, 혁신관리비서관실]

"대부분의 부처는 통합전산센터로 인력이 이관되면 인사권이 사라진다는 이유를 들어 인력운영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"고 보도

< 사실 내용 >

○ 통합전산센터의 조직 직제는 부처협의를 마치고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검토중이며, **10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**되면 센터 운영조직 발족 및 이전 개시 예정

- 조직 규모 : 센터장(국장급), 6개팀, 165명 (이체 125명, 순증 40명)

□ 조치사항

○ 동 기사는「통합전산센타 설립」논의 초기에 나타난 관계부처간 일부 이견 및 각부처 전산직들의 심정적 반발을「정보공유 사업」 추진 난항으로 잘못 보도한 것으로서

- 행정자치부가 보도내용에 대한 **대응자료 배포**(10.4) 및 **정정 보도 청구**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

○ 혁신관리 수석실에서는, 향후 관련사업 추진시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**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**를 유도하고,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**점검을 강화**하겠음
(정부혁신위 전자정부 특위와 협조)